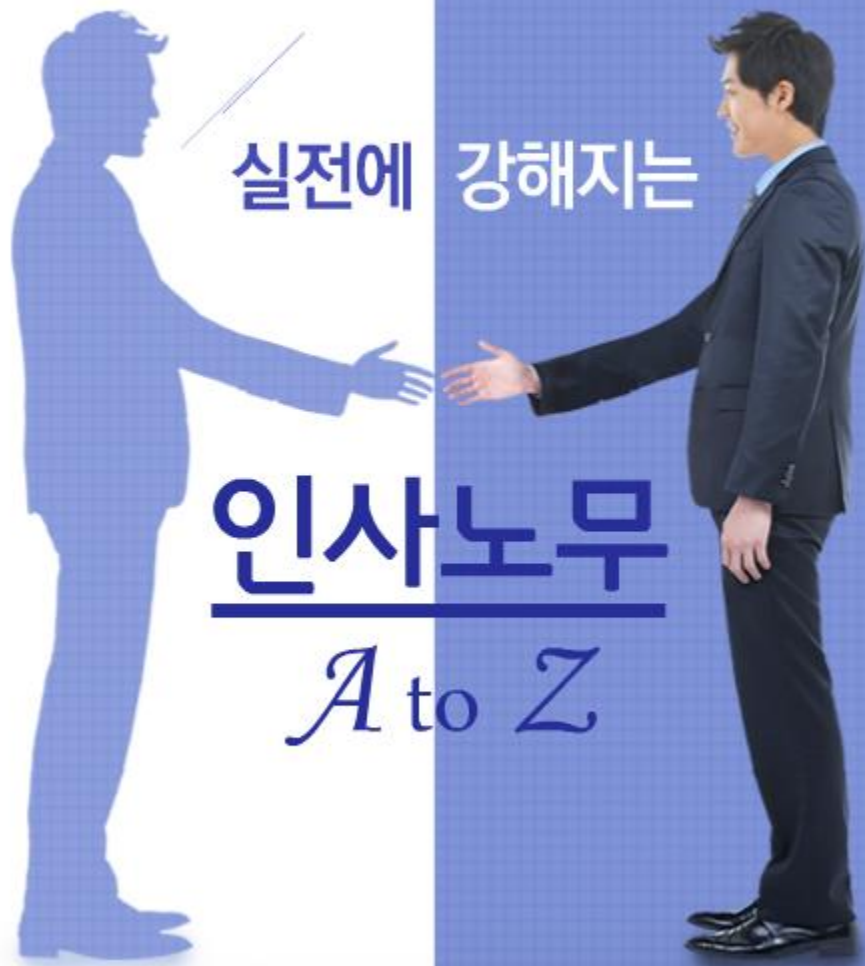


산업안전과 법정교육, 꼭 들어야 하나요?

실전에 강해지는

인사노무

A to Z



인사노무 담당자들의 FAQ

A photograph of an industrial setting, likely a tunnel or underground construction site. In the foreground, a large orange mechanical arm or structure is visible on the left. In the background, three workers wearing red hard hats and safety gear are standing near a doorway or opening. The scene is dimly lit, with very bright, circular overhead lights creating a strong glare and illuminating the workers and the surrounding rock walls.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 발생원인과 재발방지 계획을 사업주가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의무화
-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산업재해 조사표

-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관서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 또는
근로복지 공단에 요양신청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 중대재해(사망)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 의무화
- 이를 위반할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학습 내용



- 산업안전과 산업재해보상실무
- 안전보건교육
- 성희롱예방교육 등 기타 법정교육

· 학습 목표



- 산업안전, 산업재해보상실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4산업안전보건교육의 대상과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성희롱 예방교육 등 기타 법정교육들에 대해 정리할 수 있다.



산업안전과 산업재해보상실무

안전사고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손실)

- 산재보험료 증가 : 보험수지율(산재보험급여/산재보험료) 50%가감
- 민사합의금 지급 : 산재보험급여이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액 추가지급
- 처벌(산업안전보건법, 형법등)에 따른 벌금
- 광고비 손실 : 대외적인 회사 이미지 추락
- 작업중지 등에 따른 생산(공정) 손실
- 직원들의 근로의욕 저하, 노사문제로 비화
- 산재로 인한 경제손실은 19조
('12년 기준, 노사분규 손실액의 5배)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산업안전보건법(법 률)			법 령 (형사처벌 및 경제적 제재 병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 영)			
고 용 노 동 부 령(3개)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 · 위험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고시), 예규, 훈령			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복잡·
다양성

기술성

강행성

사업주
규제성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도



산업안전보건관리의 필요성

산업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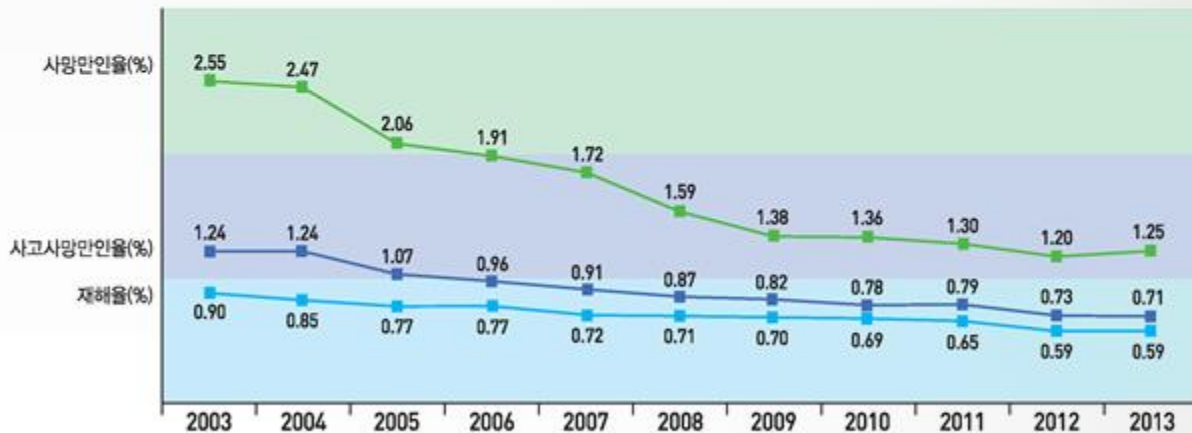
-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산업안전 보건관리

- 산업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재해 및 직업병을 예방**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관리하는 것

산업재해 발생현황

전 산업에서 하루 평균 재해자 약 250명, 사망자 약 5명이 발생



사업주의 의무는 무엇인가?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사업주에게 부여

-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 등 준수
- 산업재해발생 보고 의무
- 산업재해기록·보존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 게시 등의 의무
- 안전보건표지 부착 할 의무
-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
-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보건을 유지, 증진
-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근로자에게 알리는 등의 의무



근로자의 의무는 무엇인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주가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조치를 따라야 함

- 근로자는 사업주가 행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
-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의무
- 사업주가 제공한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 착용의무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및 처리절차



발생시
조치사항



산업재해
발생보고



산업재해
기록 · 보존



재발방지
개선활동

1. 재해자 발견 시 조치사항

- 재해발생 기계의 정지 및 재해자 구출
- 긴급병원 후송 :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구급대,
병원 등에 연락하여 긴급 후송
- 보고 및 현장보존 :
관리감독자 등 책임자에게 알리고, 사고원인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 보존



2. 산업재해 발생보고

- 산업재해(3일 이상 휴업)가 발생한 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
- 중대재해(사망)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
- 보고사항:
 - ①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 ② 조치 및 전망
 - ③ 그 밖의 중요사항



3. 산업재해 기록 · 보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 ①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 사항
- ② 재해발생 일시 및 장소
- ③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 ④ 재해 재발방지 계획



4. 재발방지 계획에 따른 개선활동 실시

1단계. 재해발생 과정확인

- ① 발생까지의 과정 파악
- ② 물적, 인적, 관리적 측면에서 사실 수집

2단계. 재해요인의 파악

- ③ 물적, 인적, 관리적 측면에서 재해요인 찾음

3단계. 재해요인의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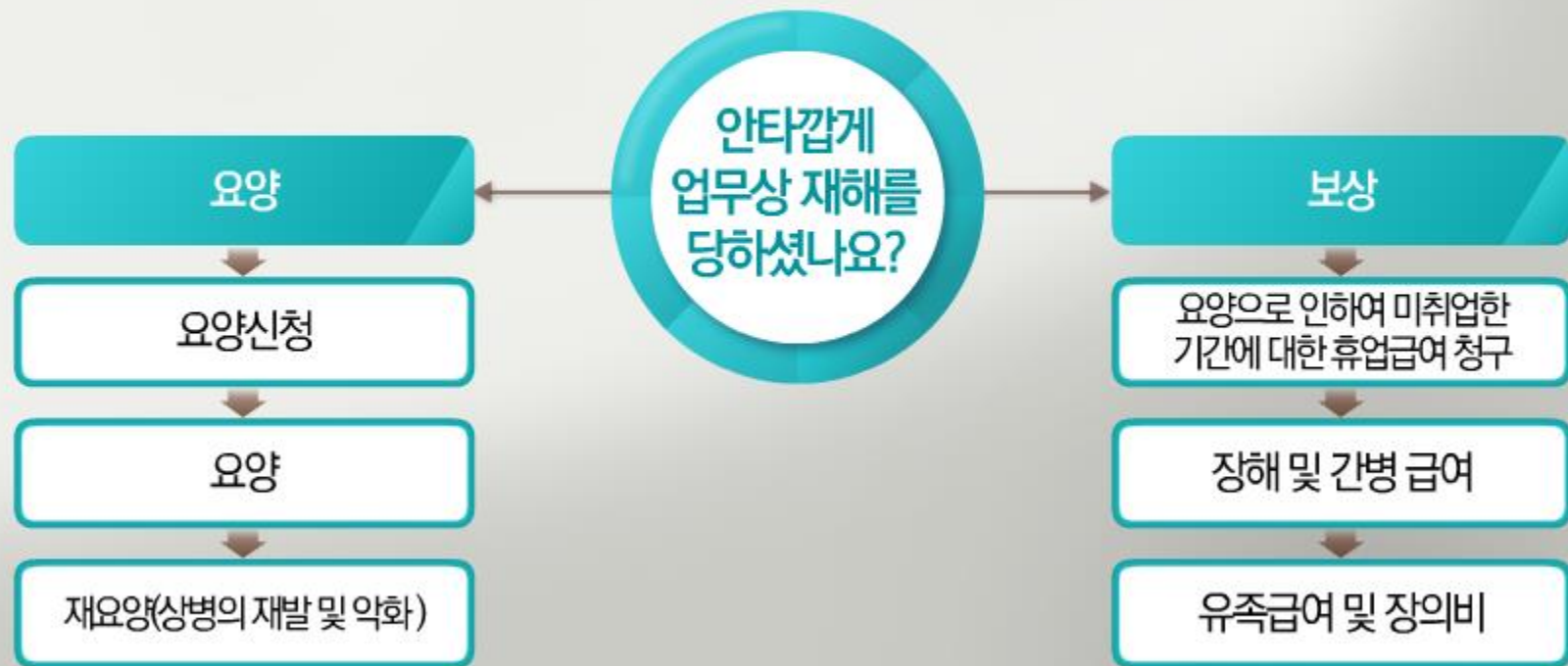
- ④ 재해요인의 상관관계와 중요도를 고려해 직접원인 및 간접원인을 결정

4단계. 계획(대책)의 수립

- ⑤ 근본적인 문제점 및 재해원인을 근거로 동종 또는 유사재해방지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산재보상서비스 신청 절차



요양 신청 절차

→ 4일 이상 입원할 만한 정도의 부상 또는 질병

응급조치 후 병원 후송
(산재 지정의료기관
여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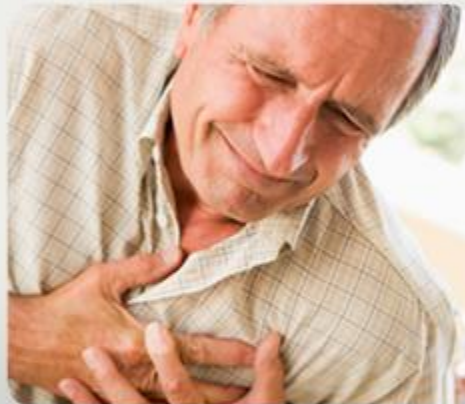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후
공단, 병원, 회사에
각각 제출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후 7일 이내
요양 승인여부 통지

부상 Vs. 질병



- 업무현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
- 산재인정 용이



- 업무로 인해 발생한 인과관계를 따지는데 어려움
- 판단하는 절차가 다름
- 산재인정 20%미만

요양급여 신청절차

1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 재해자의 인적사항, 재해목적자, 사고 경위 등 기재하고 사업주와 신청인(재해자)날인
- 병원에 제출하여 요양급여신청서 뒷면에 의사소견서 작성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병원, 회사에 각 한부씩 제출
- 업무상 질병(일부상병 제외)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

요양급여 신청절차

2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및 결과통지

- 원인이 명확한 경우 7일 이내 결정, 불명확한 경우 처리기간 지연

3

불승인 통지에 관한 이의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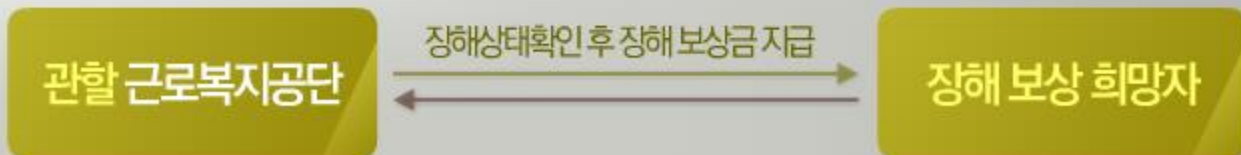
- 부상** : 90일 이내 처분지사를 경유해서 **공단산재심사실**이나 **행정법원**으로 행정소송
- 질병** :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승인이 된 결정에 한해 처분지사를 경유해서 고용노동부에 **산재보험재심사 위원회**에서 재심사 청구

보험급여 신청방법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손실 보전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

[신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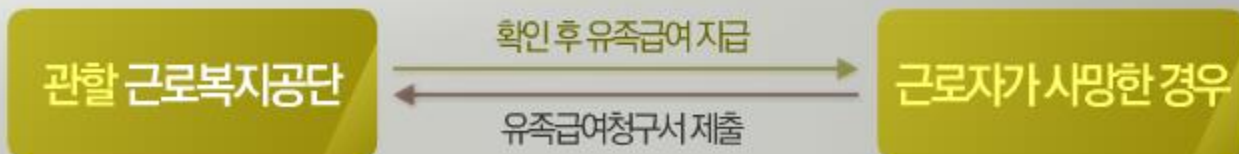


보험급여 신청방법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며, 장의비는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질을 가짐

[신청 방법]



보험급여 신청방법



-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산재보상서비스
- 요양급여 신청서 및 장해보상청구서, 유족급여청구서 등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이용
-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 1588-0075

산업안전보건서류 보존 기간 및 대상

보존기간	보존서류의 유형	관련법령조항
30년	•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록한 서류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	시행규칙 제 144조(법 제 42조 제1항, 시행규칙 제94조)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류 또는 전산입력자료	시행규칙 제107조
5년	•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록한 서류	시행규칙 제 144조(법 제 42조 제1항, 시행규칙 제94조)
	•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중 건강진단 개인표, 건강진단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시행규칙 제107조(법 제43조 제1항 및 제3항)
	• 산업안전, 보건지도사가 시행규칙 제144조 제3항에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시행규칙 제144조 제3항(법 제64조 제5항)
3년	• 산업재해 발생기록	법 제64조 제1항(법 제10조 제1항)
	•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선임에 관한 서류	법 제64조 제1항(법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 보건상의 조치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 제64조 제1항(법 제24조)
	•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조사에 관한 서류	법 제64조 제1항(법 제40조, 시행규칙 제86조)
	• 안전인증 관련 서류	법 제64조 제2항(법 제34조 제6항)
	• 기관석면조사 관련 서류	법 제64조 제3항(법 제38조의2)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5년 보존서류 제외)	법 제64조 제1항(법 제42조)
	•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5년 보존서류 제외)	법 제64조 제1항(법 제43조)
	• 지정측정기관이 시행규칙 제14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시행규칙 제 144조 제2항(법 제64조 제4항)
2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 회의록	법 제64조 제1항(법 제19조 제3항, 제299조의 2 제4항)
	• 자율안전기준 증명서류	법 제64조 제2항(법 제35조 제2항)
	• 자율검사프로그램 증명서류	법 제64조 제2항(법 제36조의2 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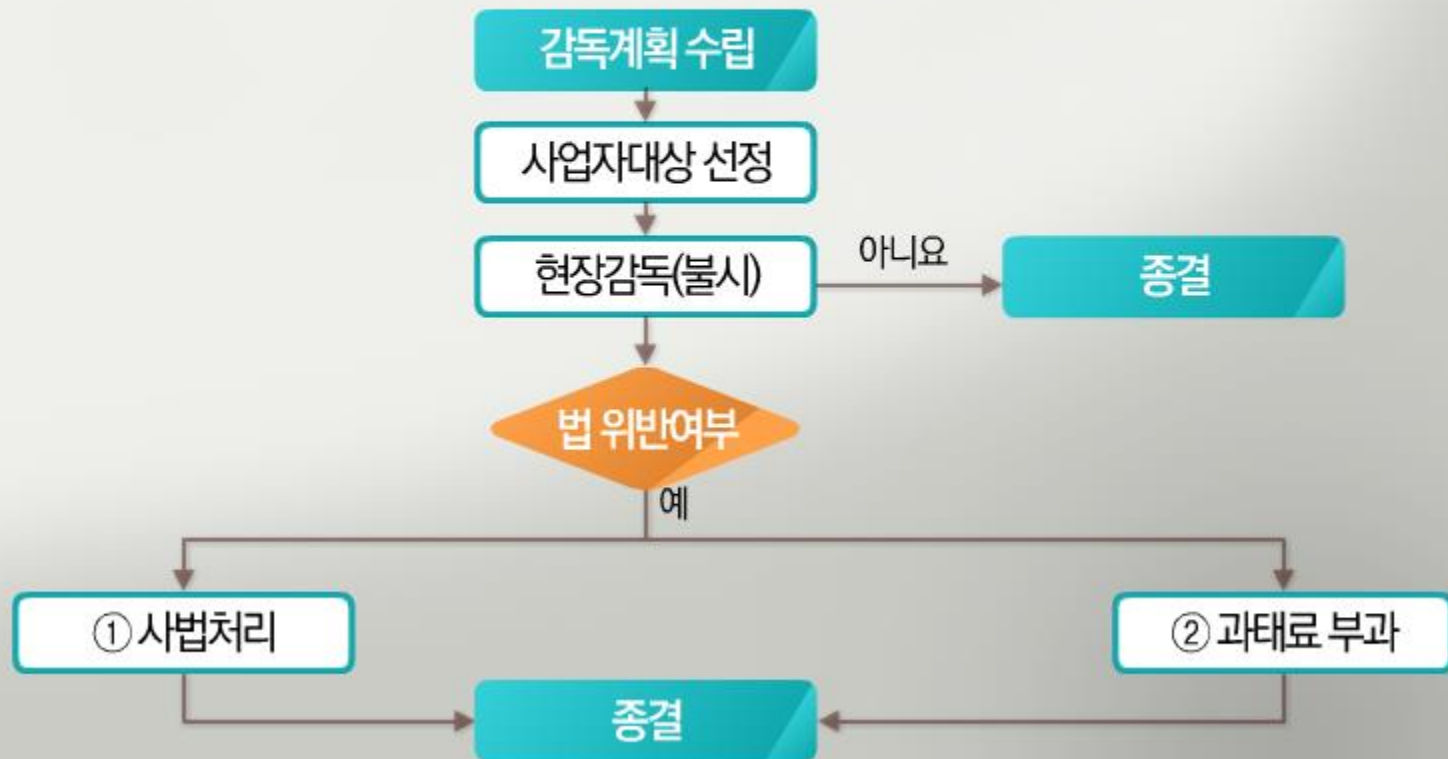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세요



사업장 감독 시 요구서류 목록

- 관리감독자 업무수행에 관한 서류
- 보호구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서류
- 위험기계·기구 검사에 관한 서류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에 관한 서류
- 화학물질 원·부자재 입·출고 현황
- 작업공정별 유해인자의 종류, 사용량, 사용실태 관련 자료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이행실태에 관한 서류
- 근로자 명부
- 재해발생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관련 서류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서류 등

사업장 감독 절차





과태료 부과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은 대부분 사업주를 의무주체로 규정
- 개인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게는 5~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과태료 부과절차

-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부과·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

즉시과태료 부과 시행

-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 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주요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내용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2조 제3항 제1호	1)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사업장 외고통사고등사업주의직접적인법 위반에 7인 이하인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600	1,000
2.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과 이 법을 따른 명령의 요지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않는 경우	법 제72조 제4항 제1호	1) 전부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2) 일부(그 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없는 부분은 제외한다)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50	250	500
3.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서 일리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 제1호	1)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2) 법 제29조제7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3) 법 제41조제 규정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0	150	300
		4) 법 제42조제1항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20	150	300
4. 법 제12조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 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 제3호	안전, 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경우(1개소 당)	3	15	30

5. 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 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 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 제3호		300	400	500
6. 법 제25조 근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조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 제2호		5	10	15
7. 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 제3호	1) 사무직 및 사무직 외의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매분기/1명당)	3	5	10
		2)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연간/1명당)	3	5	10
8. 법 제31조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 제3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9. 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 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 제3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10. 법 제3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	20	60	100
※ 상기 기준 이외에도 과태료 부과기준에 있음(세부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참조)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세요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에서는 '교육'을 중시



안전보건교육 개관



벌칙

시행규칙 제33조 1항 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 부과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세요

가. 사무직 및 사무직 외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 미 실시(매분기 1명당)

→ 1차 위반 과태료 3만원, 2차 위반 5만원, 3차 위반 10만원

나.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 미 실시(매분기 1명당)

→ 1차 위반 과태료 3만원, 2차 위반 5만원, 3차 위반 10만원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13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미 실시(1명당)

→ 1차 위반 과태료 5만원, 2차 위반 10만원, 3차 위반 15만원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13

특별안전보건교육 미 실시(1명당)

→ 1차 위반 과태료 5만원, 2차 위반 10만원, 3차 위반 15만원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13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미 이수

→ 1차 위반 과태료 5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안전보건교육 종류 및 실시방법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정기교육	사무직근로자 외 사무직근로자 관리감독자	매분기 6시간 이상 매분기 3시간 이상 연간 16시간 이상	①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②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등 ※ 사무직 종사근로자 외의 근로자 중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 제외 근로자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1시간 이상	①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② 작업개시전 점검에 관한 사항 등
작업내용 변경교육	일용 제외 근로자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1시간 이상	①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② 작업개시전 점검에 관한 사항 등
특별안전 보건교육	일용 제외 근로자 일용직근로자	16시간 이상 2시간 이상	① 공통교육 ② 개별내용(유해위험 38개 작업별 개별교육) 등

안전보건교육은 사무직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매년 필수로 수강하여야 함

 안전보건공단 <small>산업안전보건</small> 정보공개	사업안내/신청	알림마당	공단소개	정보마당
--	----------------	-------------	-------------	-------------

공단 강사활용 방법

코라야 당신의 생명을 지킵니다

공단 이동교육버스 활용방법

안전을 넘어 확신시키겠습니다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예방의 원칙이 우리사회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공단이 앞장서겠습니다.
안전문화를 널리 확산시키겠습니다.

교육자료 다운로드 방법

작업 전 안전점검 정보

작업 전 안전점검, 당신의 생명을 지킵니다

🔍

HOT!! 핫이슈

- 불꽃 발생발생시 소화작업자 건강검진
- 화학물질 안전보건관리 10계명
- 여압중(예틸 알코올) 급성중독 발생

공지사항	알림공고	보도자료	반부패/청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사업 등의 부패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 2016년도 신규채용(채용형인턴) 면접심사 합격 · 2016년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개정 안내 · 제20회 방호장치 보호구 품질 대상(大賞) 품목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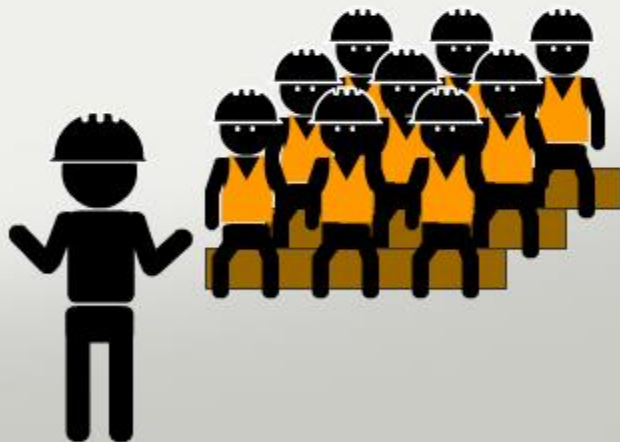
- 중대재해속보
- 업종별 사례

산업재해통계

- 산업재해통계
- 산업보건통계

안전보건교육일지(예시)

안전 보건 교육



안전보건교육일지(예시)		문 제	일 정	부 사	내 용		
작성일자 : 20 월 일 작성자 :							
교육의 구분	1. 해당식 교육대상인 사람 2. 해당식별 명칭식 교육대상인 사람 3. 해당식별명칭식 교육대상인 사람 4. 정기안전보건 교육대상인 사람 5. 해당식별명칭식 교육대상인 사람 6. 기타						
교육의 내용	구분	제	년	월	교육대상자수		
	교육 대상자 수						
교육의 방법	참여인원						
	교육 대상자 수						
교육의 목적							
교육의 내용							
교육시간 및 장소	연월	일	교육시간	장소			
특이사항							
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성명	날인	연번	소속	성명	날인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세요

안전보건교육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별표8)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 분기 3시간 이상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 분기 3시간 이상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 분기 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2 참조

-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시행 2015. 1. 1)

- 제39조 ①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대상자 <개정 2010. 7. 12>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안전보건교육
자료는 어떻게
만들지?

외부에서
강사를 어떻게
초빙하지?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퇴직연금교육





법정교육
무료강의가 많은데..
들어도 될까요?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에서 단속 시작
(법적 규제는 없음)



법정교육 실시규정에 맞는 교육업체 선정에 신중해야 함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근거법령

-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반시 사업주 **300만원 이하 과태료**)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하게 되나요?

노동부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중에 교육여부와
3년간 서류보관의무에 대한 항목으로 판단



FAQ




우리 사업장은 '남성'만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나?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은 반드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함.

단, **1)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2) 사업주 또는 근로자 모두가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단순히 교육 자료 배포 및 게시하는 등의
약식으로 교육진행 가능

성희롱예방교육은 몇 시간을 진행하나요?

- 
- 고용노동부에서 노무법인, 경총 사업주단체, 평생교육기관 등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
 - 시행령 :
위탁교육기관에서 진행 시 1년에 1회 이상,
1시간 이상 진행
 - 위탁교육기관이 아닌 곳은 시행령을 직접적으로 적용 받지 않음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근거법령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FAQ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1년에 몇 회 실시해야 하나요?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3조에 따른 내부관리계획
또는 **기관의 (연간)교육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

교육증빙

성희롱예방교육도 동일

- 자체교육 : 교육 결과보고서(개요, 인원, 사진 첨부)
- 사이버교육 : 수료증

www.privacy.go.kr



과태료

- 미 이수로 인한 과태료 규정 없음
- 법정교육에 벌금규정 등을 내세워 홍보하는 경우 있으나 이는 근거 없는 내용임에 주의
- 개인정보 분실, 도난 및 개인정보 파기조치 등을 잘못하였을 경우의 과태료, 벌금 및 징역형 부과 문제와 교육자체의 미 실시로 인한 처벌규정의 부재와는 다른 국면의 문제임

교육대상

- 개인정보취급자
- 전 직원 **아님에 유의**
 - ➔ 해당자만 사이버교육 수료증 발급받아 증빙 가능



교육방법

www.privacy.go.kr

● 사이버교육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배움터>> 사이버교육
- (수강) 기관(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과정을 택할 수 있으며, 교육수료 후 수료증 발급 됨

● 자체교육

- (교육자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자료마당>> 교육자료
- (홍보자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자료마당>> 홍보자료

●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배움터>>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검색

※ 기관(기업)에서 교육계획을 수립 후 전문강사와 직접 연락해 강의료 등 협의 후 진행

성희롱예방교육

Vs.

개인정보보호 교육

- 사기업의 경우 교육 실시
점검을 위한 별도 점검 미 진행
- 공기업, 국가기관의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의무적으로
점검(증빙자료 제출 및 평가)

- 과태료, 지도점검 없음

개인정보보호 교육

[사례1]

2014~2015년 업종별 지정 감독 진행

당시 개인정보 유출 발생 사건으로
행정안전부와 관련 부서의 합동점검 실시

개인정보보호 교육

[사례2]

협력사의 개인정보유출로 대기업까지 책임을 져야 함



사용자의 책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근거법령

- ① 사용자는 법령 및 퇴직연금규약을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②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